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1577명 공개

체납액 1000만원 이상·1년 이상 경과
총액 1232억… 개인 최고 47억 체납

서울시가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 현황을 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자치구·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 세금 39억원이 징수됐으며, 납부·이의 제기·소송 진행 등 사유가 인정된 246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1577명으로, 체납액은 1232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1078명으로 736억원, 법인은 499개 업체로 49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임대

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이경석(35)으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과 협력해 명단 공개 체납자의 해외직구·입국 휴대품까지 통관 보류 후 매각 처분을 통해 징수에 나서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원외재판부 신설·법조타운 조기조성 맞손

경기도·법무부·법원행정처·의정부시
경기북부 사법복지 향상 업무협약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 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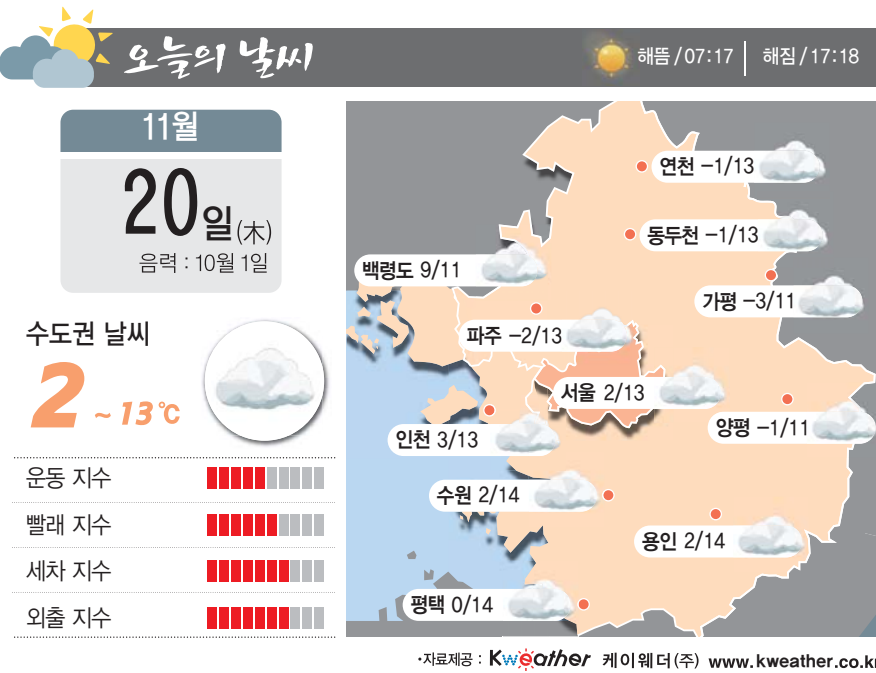
협약은 경기 북부의 사법 접근성 향

상과 법조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있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부지 조성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고, 법조타운 준공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완료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사법복지 확충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메트로 한줄뉴스



▲영국 정보기관 “중국, 영의원 보좌진 포섭 시도”…中 “완전한 날조”
▲“中, 日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

/사진 뉴시스

▲살만 만난 트럼프 “사우디 ‘주요 非나토 동맹’ 지정”
▲튀르키예 관광 독일인 사망자 1명 늘어…“호텔 살충제 문제 추정”

▲중일 관계 악화 속 日언론 “한일, 갈등보다 협력 확대를”
▲英 노동당 일각서 ‘스타머 총리 교체’ 논의… “인내심 바닥”

대학생부터 경험·경력 차곡차곡 서울시, 청년 ‘경력 사다리’ 만든다

청년 일자리 정책 ‘서울 영커리언스’
내년부터 2030년까지 1.6만명 지원

선제투자·성장중심으로 정책 전환
재학생부터 진로탐색·실무경험을
캠프-인턴십-점프업 등 5단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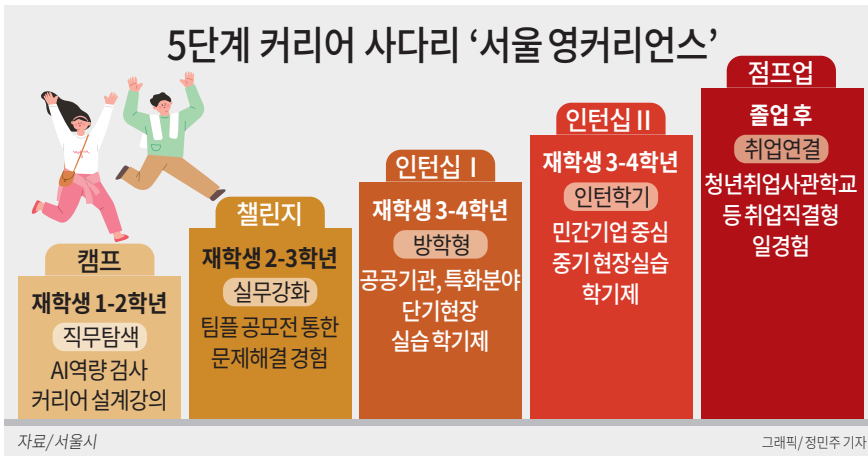
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사후 지원형’에서 ‘선제 투자·성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며, 재학생 단계부터 일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만 6000명의 청년에게 단계적 실무 경험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6000명 규모 인턴십 기회를 우선 마련해 청년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재학생 중심 인턴십 플랫폼 구축

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커리언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1년 수립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프로젝트)’을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총 2895만명(누적)을 지원해 왔다.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인 ‘서울 영커리언스’ 사업은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청년을 위한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이번 3차 계획에는 미취업 청년 훈련·생계 등 사후 접근에 머물렀던 기존 정책 기조를 보완, 청년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전환적 정책 구조가 담겼다.

◆캠프·챌린지·인턴십·점프업 5단계

서울 영커리언스는 ▲캠프 ▲챌린지 ▲인턴십I ▲인턴십II ▲점프업 등 총 5단계로 구성된다. 규모는 내년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6000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대학교 1~2학년생, 비진학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캠프’는 본격적인 경력 형성에 앞서 AI 역량검사,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준비된다.

대학교 2~3학년을 위한 2단계 ‘챌린지’는 캠프에서 탐색한 진로와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3~4단계 ‘인턴십I·II’에서 청년들은 기업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된

다. 캠프에서 찾은 직무 적성과 챌린지에서 얻은 문제해결 능력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인턴십은 학점(최대 18학점)을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한다.

마지막 5단계 ‘점프업’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유망 직무 분야, 대기업·스타트업 일 경험을 지원하고 트랜드에 발맞춘 취업 역량 교육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우선 12월 중 기획보한 3500개 기업 풀과 13개 공공기관을 바탕으로 인턴십II(학기 중 인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미취업 구직자 중심이던 기존 정책을 재학 단계로 전환해, 단계적인 일 경험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의대 15곳 사탐 허용… 과탐 가산점 ‘변수’

의대 39곳 중 15곳, 정시 사탐 허용
과탐 가산점… 실질 합격선은 자연계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15개 대학이 2026학년도 정시에서 사회탐구(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개교 늘어난 것으로, 확률과 통계·사탐 조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의대 교차지원 폭이 일부 확대된 셈이다. 다만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합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학가와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시모집에서는 전체 39개 대학 중 15개교(38.5%)가 사탐 응시를 허용한다. 가톨릭대·경북대·부산대는 수학·탐구 지정과목을 모두 폐지했고, 고려대도 탐구에 한해 유지하던 지정과목을 없애 필수 응시과목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올해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경

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의대가 사탐 선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사탐 허용 흐름은 치대와 약대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치대에서는 올해 경북대·부산대가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11개 치대 중 5개교가 확률과 통계와 사탐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다.

약대도 가톨릭대, 경북대, 부산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경희대, 동국대, 삼육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E) 등을 포함해 전체 37개 약대 중 13개교가 필수 응시과목을 두지 않게 됐다. 특히 약대는 지정과목이 없는 13개 대학 중 11개교가 수도권에 있어 인문계·확통·사탐 응시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탐 허용이 곧바로 합격 가능성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 응시자에게 3~5%, 많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권에서는 3~5%의 가산점만으로도 합격선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사탐’ 조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점수 산출 단계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 합격선은 여전히 자연계 중심(미적분·기하·과탐 응시)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허용으로 의·치·약대 교차지원 폭은 넓어졌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여전히 수학과 탐구 반영 방식”이라며 “대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만큼, 인문계 과목 응시자는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반드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